

“돈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머스크, 왜 ‘이행 설계’는 비어 있나

— 풍요의 약속이 다수의 권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

반자반노 이상연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할 미래를 오래 전부터 말해 왔다. 2017년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머스크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부분 대체할 것이며 “어떤 형태의 보편적 기본소득(UBI)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World Government Summit](#))

그런데 최근 머스크의 언어는 한층 과감해졌다. 머스크는 이제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을 말한다. 더 나아가 AI·로봇이 충분히 발달하면 “일은 선택이 되고, 화폐의 의미가 약해지거나(심지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 2025년 11월 미국-사우디 투자포럼 패널에서 머스크는 “어떤 시점에 통화(currency)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보편적 고소득”과 “일의 선택화”를 같은 그림 안에 놓았다. ([Business Insider](#))

문제는, 이 서사가 ‘도착지’만 화려하고 ‘다리’가 비어 있다는 점이다. 도착지가 풍요여도, 다수가 그 풍요에 도달하지 못하면 풍요는 사회가 아니라 소수의 섬이 된다. 그리고 다리가 비어 있으면, 풍요가 오기 전에 붕괴가 먼저 온다. 이 붕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이행 설계(transition design)”다. 머스크의 담론이 비판받아야 하는 핵심은 “미래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행 설계가 없다”는 점이다.

1. ‘풍요’보다 먼저 오는 것은 ‘구매력 붕괴’다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하면 임금소득이 줄어든다. 임금소득이 줄면 구매력이 줄고, 구매력이 줄면 기업 매출 전망이 꺾인다. 생산능력이 늘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시장은 멈춘다. 이 단순한 회로가 바로 전환기의 첫 번째 공백, ‘소비 공백’이다.

그래서 UBI든 UHI든, 그것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제도로 기능하려면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원(무엇을 과세·환류할 것인가)
- 권리(누가 어떤 자격으로 받을 것인가: 시민권/거주권/기여/연령 등)
- 집행(어떤 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 포획 방지(정치·재벌·플랫폼 권력이 제도를 장악해 ‘선별 지급’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는 장치)

그런데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 발언은, 언론 보도에서조차 “세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형태로 반복해서 소개된다. ([Fortune](#))

바로 여기가 이행공백이다. “보편적 고소득이 온다”는 말은 기대를 자극하지만, 제도가 없으면 기대는 권리가 되지 못한다. 기대는 불안의 반대도 아니다. 기대가 큰 만큼, 현실의 불안이 폭발할 때 사회적 충격도 커진다.

2. 에너지·공급망·안전이라는 ‘물질적 기반’은 누가 어떤 돈으로 유지하나

두 번째 공백은 ‘투자·안전 공백’이다. AI 시대의 풍요는 로봇만으로 오지 않는다. 전력·송배전망, 데이터센터, 반도체와 핵심자원 공급망, 물류, 사이버·물리 안전, 사고 책임과 보험·재보험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막대한 CAPEX/OPEX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비 공백이 커지면, 인간은 투자 유인을 잃고 정부는 세수 기반이 흔들린다. 결과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경색되고, 안전·복구·규제 역량이 약해지며, 전환기의 사고·분쟁 비용이 폭증한다. 머스크 자신도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보편적 고소득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는 트라우마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 전환기의 충격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Business Insider](#))

전환기의 핵심은 “미래에 풍요가 오느냐”가 아니라 “풍요가 오기 전에 무너지지 않느냐”다. 그런데 머스크의 담론은 전환기의 금융·인프라·안전 설계를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은 “이행공백 방치” 의심이 출발한다.

3.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백 방치가 유리한 구조’는 보인다

의도는 마음속에 있다. 외부에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경제는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어떤 발언과 행동이 반복될 때, 그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특정 집단(혹은 특정 전략)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면, 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가설이 된다.

머스크의 UHI 담론이 가진 위험한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1) “곧 풍요가 온다”는 말이 ‘권리 설계 요구’를 지연시킨다

보편적 고소득이 정말 오려면, 지금 당장 권리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의 풍요’를 강조하는 언설은 현재의 분배·환류·세제 설계를 “나중 문제”로 밀어내는 효과를 낳는다. 말의 낙관은 현실정치의 비용을 덮는다.

이때 중요한 보조 근거가 있다. 보편적 환류는 결국 조세·규제·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그런데 머스크는 부유층의 “공정한 몫”을 요구하는 정치인과의 공개 설전에서 조롱성 발언을 던진 전력이 있다. 2021년 11월 버니 샌더스가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하자 머

스크는 “아직 살아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응수했고, 주식 더 팔아줄까라고 비꼬았다. Reuters가 이를 보도했다. ([Reuters](#))

이 장면이 곧바로 “세금을 내기 싫다”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편적 환류’의 핵심인 조세 논의를 공론장에서 조롱으로 처리하는 태도는, ‘보편’을 제도화할 정치적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인상을 강화한다.

(2) 전환기의 혼란은 ‘현금흐름·지배력’을 가진 쪽에 재편의 기회가 된다

전환기는 자산가격 변동, 실업, 지역 붕괴, 정치적 급진화가 동반되기 쉽다. 이때 현금흐름과 지배력을 가진 쪽은 헐값 인수·규제 포획·시장 재편을 통해 더 큰 지배력을 얻는다. 즉, 공백이 클수록 전환기의 혼란은 ‘선별적 탈출’을 가능하게 한다.

머스크가 “보편적 고소득”을 말하면서도 세부 설계를 내놓지 않을 때, 그 말은 다수에게 권리를 주는 설계가 아니라 “혼란을 견디게 하는 이야기”로 기능할 수 있다. ‘실현의도 없는 약속’이 선동으로 변하는 경로가 여기서 열린다.

(3) ‘공공의 자원’으로 성장해 놓고 ‘공공 환류’를 말하지 않는 비대칭

머스크 개인의 능력과 혁신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보편”을 말하는 위치라면, 자신의 제국이 공공의 계약·대출·보조금·세액공제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다시 공공으로 어떻게 환류되는지까지 말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2025년 분석에서 머스크의 기업들이 지난 20여 년간 연방·주·지방 정부의 계약, 대출, 보조금, 세액공제 등 최소 38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정리했다(기밀 계약 등은 제외). ([The Washington Post](#))

공공의 리스크와 공공의 돈이 성장의 바닥이 되었으면, 자동화 이익이 다수에게 권리로 환류되는 제도 설계(사회배당, 시민지분, 국민계정 등)를 함께 제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머스크의 UHI는 그 연결고리가 비어 있다. 이 비대칭은 “보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강한 근거다.

4. ‘공적 광장’이라 부르면서도, 공적 거버넌스는 왜 거부되는가

머스크는 트위터(X)를 인수하며 “트위터는 디지털 타운 스퀘어(공적 광장)”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 Reuters는 머스크가 “자유로운 발언이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트위터는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썼다고 전했다. ([Reuters](#))

공적 광장이라면 운영은 투명성과 책임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는 2023년 12월 X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식 절차를 개시했고, 2024년 7월에는 다크패턴, 광고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 등에서 잠정적 위반 소지를

당은 ‘예비 결론’을 통지했다. ([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2025년 12월 4일 EU 집행위는 DSA 위반(투명성 의무 등)을 이유로 X에 1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uropean Commission](#))

여기서 핵심은 “EU가 옳다/그르다”가 아니다. 핵심은 머스크가 ‘공적 광장’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 놓고도, 그에 걸맞은 공적 거버넌스(투명성·감사·책임)의 강제에는 반복적으로 충돌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보편적 고소득” 같은 거대 담론에서도 동일한 패턴—거대 서사, 빈 설계—이 재현될 가능성을 높인다.

공론장의 규칙(노출·추천·제재)을 좌우하는 플랫폼 권력은 전환기의 분노와 요구를 ‘권리 설계’로 수렴시키기보다 ‘서사 소비’로 흘뜨릴 수 있다. 그래서 머스크의 UHI 서사가 위험하다. 권리를 말하지 않는 풍요 서사는, 공백을 메우는 정치(조세·환류·사회계약)를 늦춘다.

5. 그렇다면 “머스크가 붕괴를 의도한다”는 의심은 어떻게 성립하나

여기서 우리의 핵심 의심으로 돌아간다. “머스크는 영리한데, 왜 이행공백을 채우지 않나. 이 공백을 방치한 채로 ‘돈이 무의미해진다’는 선동이 확산되면 붕괴가 온다. 머스크는 그 붕괴를 다른 의도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 의심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논리로 “합리적 의심”의 형태로는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1. 머스크는 자동화가 대량 실업·불안을 초래한다는 전망을 반복한다(UBI/UHI 언급). ([World Government Summit](#))
2. 그럼에도 그 불안을 제도적으로 완충할 권리 설계(재원·거버넌스)를 제시하지 않는다(언론 보도에서도 세부 부재가 반복). ([Fortune](#))
3. 보편 설계의 핵심인 조세·환류 논의에 대해서는 조롱·설전으로 응수해온 정황이 있다(‘공정한 몫’ 요구에 대한 Reuters 보도). ([Reuters](#))
4. 동시에 머스크의 기업 제국은 공적 자금·계약·보조에 크게 의존해 성장해 왔다는 분석이 존재한다(워싱턴포스트의 380억달러). ([The Washington Post](#))
5. 공적 광장이라는 수사를 쓰면서도 공적 규범(투명성·책임)과 충돌하는 사례가 이어졌다(EU DSA 절차와 과징금). ([European Commission](#))

이 다섯 가지가 한데 모이면, 다음 결론이 가능해진다.

- 머스크의 “보편”은 ‘권리로 보편화된 삶’이라기보다 ‘기술이 만든 풍요가 언젠가 흘러넘친다’는 낙관에 가깝다.
- 낙관은 전환기의 정치(분배·환류·권리 설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 전환기의 혼란은 지배력과 현금흐름을 가진 소수에게 재편의 기회가 된다.
- 따라서 ‘공백 방치’는 결과적으로 소수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고, 그 점에서 “의도적 방치”라는 의심이 합리적 가설로 성립한다.

즉, 우리의 의심은 “머스크가 악당이라서”가 아니라 “공백이 만들어내는 정치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묻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때 설득력이 생긴다.

6. 대안: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 있는 시민’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서 공주민제(DCA)가 겨냥하는 인간형이 등장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Humann(휴만)은 “노동이 삶의 조건이던 인간”에서 “노동이 줄어도 사회 핵심 자본의 성과에 권리로 연결되는 시민”으로의 전환을 뜻한다.[주1] 핵심은 시혜적 지급이 아니라 **자본접근권**이다. 즉 배당·지분·의결·국민계정 환류 같은 권리 구조를 통해 다수가 자동화의 성과를 ‘소비 능력’이 아니라 ‘소유권’으로 확보하는 체계다.[주2]

이 관점에서 보면, 머스크의 UHI는 ‘결과’만 말하고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공주민제는 반대로 “권리 설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전환기의 다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 자동화 초과이익(로봇·AI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을 시민계정으로 환류하는 사회배당
- 공공 인프라(전력망·데이터센터·공급망 안전)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국민배당으로 연결
- 특정 산업의 규제 크레딧·정부계약 이익을 ‘기업 내부의 사유화’로 끝내지 않고 일정 비율을 시민지분·공공지분으로 환류
- 포획 방지: 정치권·대기업·플랫폼이 배당·지분 배분을 임의로 선별하지 못하게 헌정·법정 장치로 고정

이런 설계가 있어야 “보편적 고소득”은 선동이 아니라 제도가 된다. 풍요는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 된다.

7. 머스크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낙관’이 아니라 ‘설계’다

머스크의 언설은 강력하다. 기술 낙관은 사람들을 움직인다. 하지만 전환기의 역사에서 낙관은 종종 지배의 언어로도 기능해 왔다. “곧 좋아진다”는 말이 권리 요구를 늦추고, 그 사이 재편이 완료되면, 좋아지는 것은 소수에게만 도착한다.

그래서 머스크를 비판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인신공격이 아니다. 질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당신이 말하는 UHI의 재원은 무엇인가. 세금인가, 로봇세인가, 데이터 지대인가, 공공 인프라 수익 환류인가.
- 지급은 누가 결정하고 어떤 권리로 보장되나. 시민권 기반인가, 거주권 기반인가.
- 플랫폼과 알고리즘 권력이 전환기의 공론장을 좌우할 때, 다수의 권리 설계는 어

떨게 보호되나.

- 당신의 기업들이 누려온 공공계약·보조·세액공제의 성과는 어떤 방식으로 공공에 환류되나.

이 질문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보편적 고소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기술이 된다. 불안을 진정시키되 권리는 주지 않는 기술, 전환기의 고통을 미래로 미루되 재편은 현재에 완료하는 기술이 된다.

머스크가 정말로 “보편”을 말할 자격을 얻으려면, 이제는 말의 낙관을 내려놓고 권리의 설계를 내놓아야 한다. 그 설계가 없을 때, 우리가 제기한 의심—“그는 다수를 포함한 Humann이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세상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은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 가설로 남는다.

주(註)

[주1] Humann(휴만): 노동소멸기에도 존엄이 유지되도록, 사회 핵심 자본의 성과(이익·배당·의결)에 시민이 권리로 연결되는 인간형을 뜻한다.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 있는 시민”이라는 의미가 핵심이다.

[주2] 공주민제(DCA): 노동소멸기 핵심 위험을 “유효수요 붕괴”와 “포획(통제력의 집중)”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분산 소유·분산 의결·분산 책임** 및 성과의 권리 환류(국민계정/사회배당/시민지분 등)를 제도 핵심으로 둔다.

2025.12.27.